

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전략

2018년 5월 25일

강 동 수

Korea's Leading Think Tank





C O N T E N T S

- | 경제 인식의 전환
- | 한국의 정책
- |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
- | 향후 한국의 과제



Part-I

경제 인식의 전환

> 성장률 둔화와 불평등 심화는 전세계적 현상

1980년대 이래 Kuznetz(1955)의 역U자 가설*이 지지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

Kuznetz의 역U자 가설: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일정한 성장 이후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주장으로 1970년대까지 철칙으로 받아들여짐.

> 성장의 지속성 확보가 중장기적으로 최적이라는 논리 대두

낙수효과가 의문시 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약화됨에 따라 주류경제학에서의 성장관도 변화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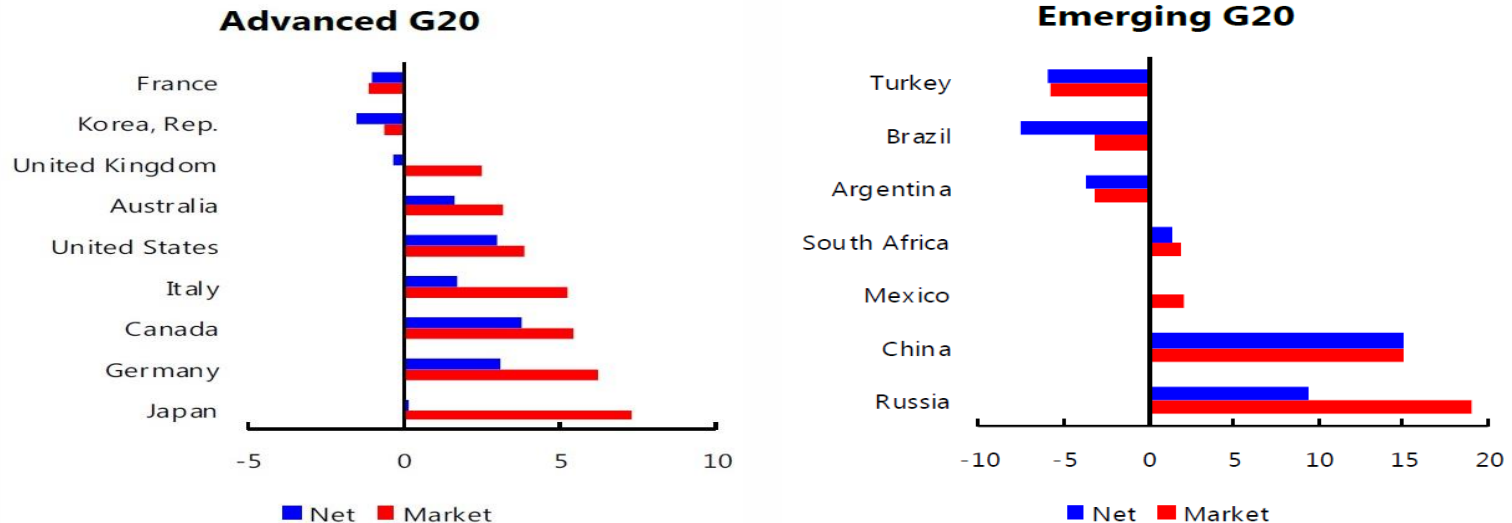
⇒ 신자유주의 경제기조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론 대두

> 소득불평등도 확대는 보편적 현상

| 1990년대 이래 대부분 G20 국가내 불평등도 증가 (IMF, 2017)

- ✓ 일부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우 분배구조의 개선이 있었으나 불평등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

| G20 국가내 불평등도 및 지니계수(1990-1012) |



자료:IMF(2017a)

> 추세적 요인

기술발전

- 자본과 숙련기술에 편향적으로 수요 발생 (Card and Dinardo, 2002)
- 중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중산층의 피해 발생 (Acemoglu and Autor, 2011)

경제통합

- 무역채널: GVC 변화로 저숙련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(선진국), 자본집약적 부문에 자원이 집중되어 노동소득 하락(신흥국 및 개도국)
- 금융채널: 자본의 효율적 배분 + 금융감독 완화 → 금융위기 가능성 상승 (Ghosh, Ostry and Qureshi, 2016) → 저소득층에 피해 집중 (De Haan and Sturm, 2016)

고령화

- 청년층 소득불평등 << 고령층 소득불평등 (OECD, 2014)
-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층 비중 증가

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가별 차이

> 포용성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해석 · 적용

아일랜드

- 평가: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지니계수 차이가 가장 큰 국가
- 소득불평등 원인: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소득 차이, 높은 실업률
- 정책방향: 적극적 조세 · 복지시스템, 교육수준 격차 해소

스웨덴

- 평가: 국제적 기준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국가
- 소득불평등 원인: 고령화, 가족구성 변화, 이민, 자본소득 증가
- 정책방향: 이민자의 사회통합,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

일본

- 평가: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부진
- 소득불평등 원인: 창업부진, 기업구조조정 미약, 노동시장 이중구조
- 정책방향: 생산성 향상,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, 노동이동성 지원

핀란드

- 평가: 불평등도는 낮지만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경제활력 저하
- 소득불평등 원인: 과도한 사회보장 및 고용보호
- 정책방향: 근로유인 확대,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

> IMF: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은 비선형관계

지니계수 27%를 기준으로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의 관계가 바뀜
(Grigoli and Robles, 2017)

27% 미만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만,
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

> 한국에의 시사점

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0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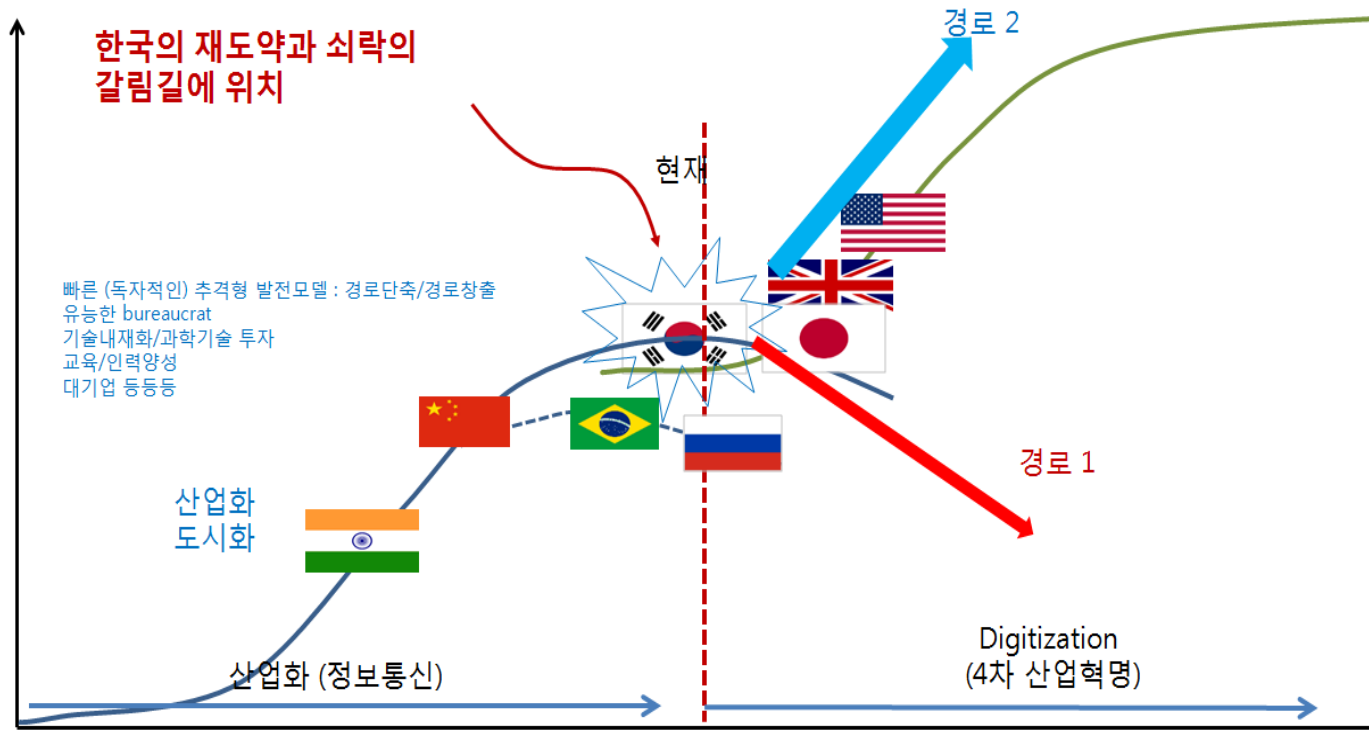
⇒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까?



Part-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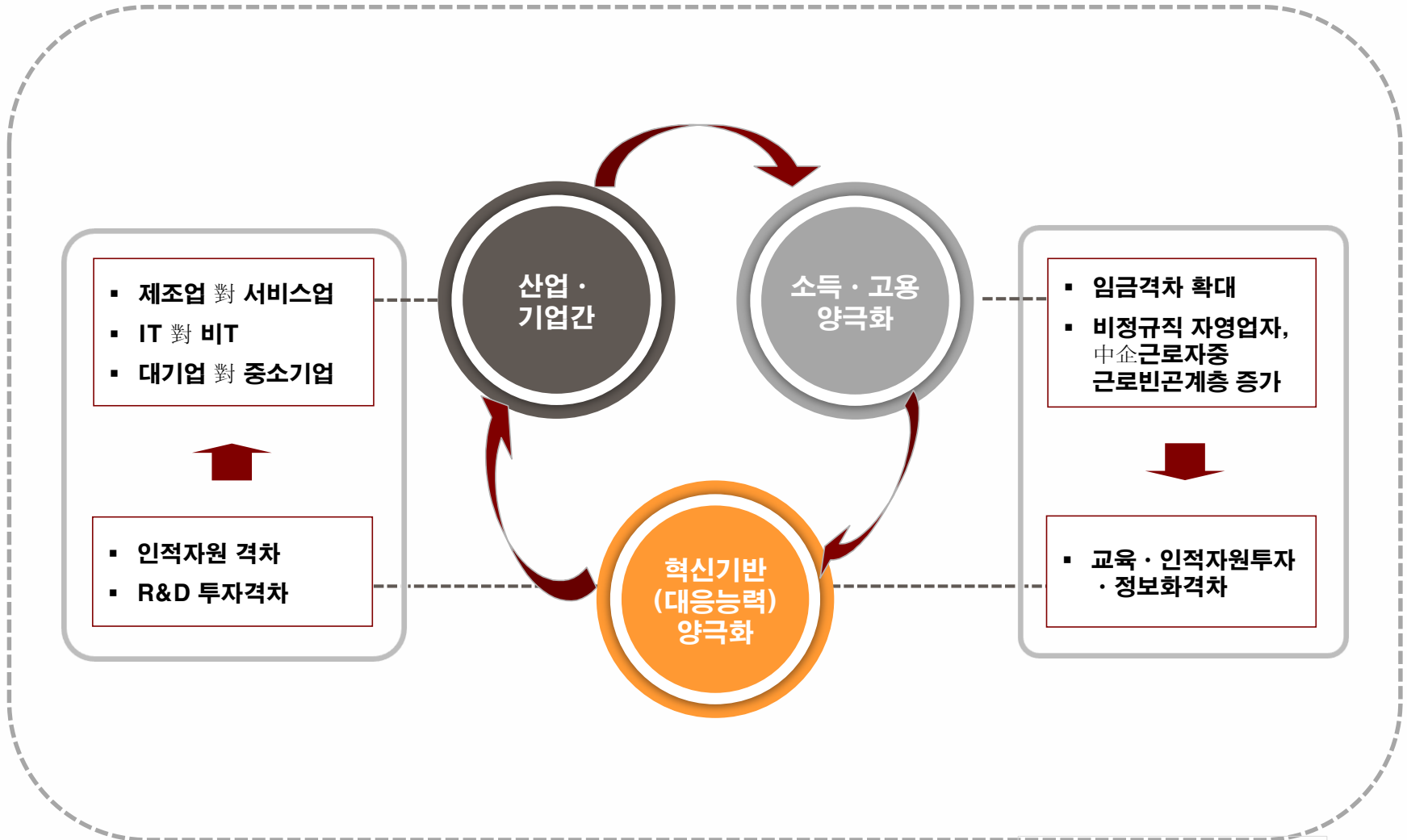
한국의 정책

한국 경제 · 사회 발전경로의 이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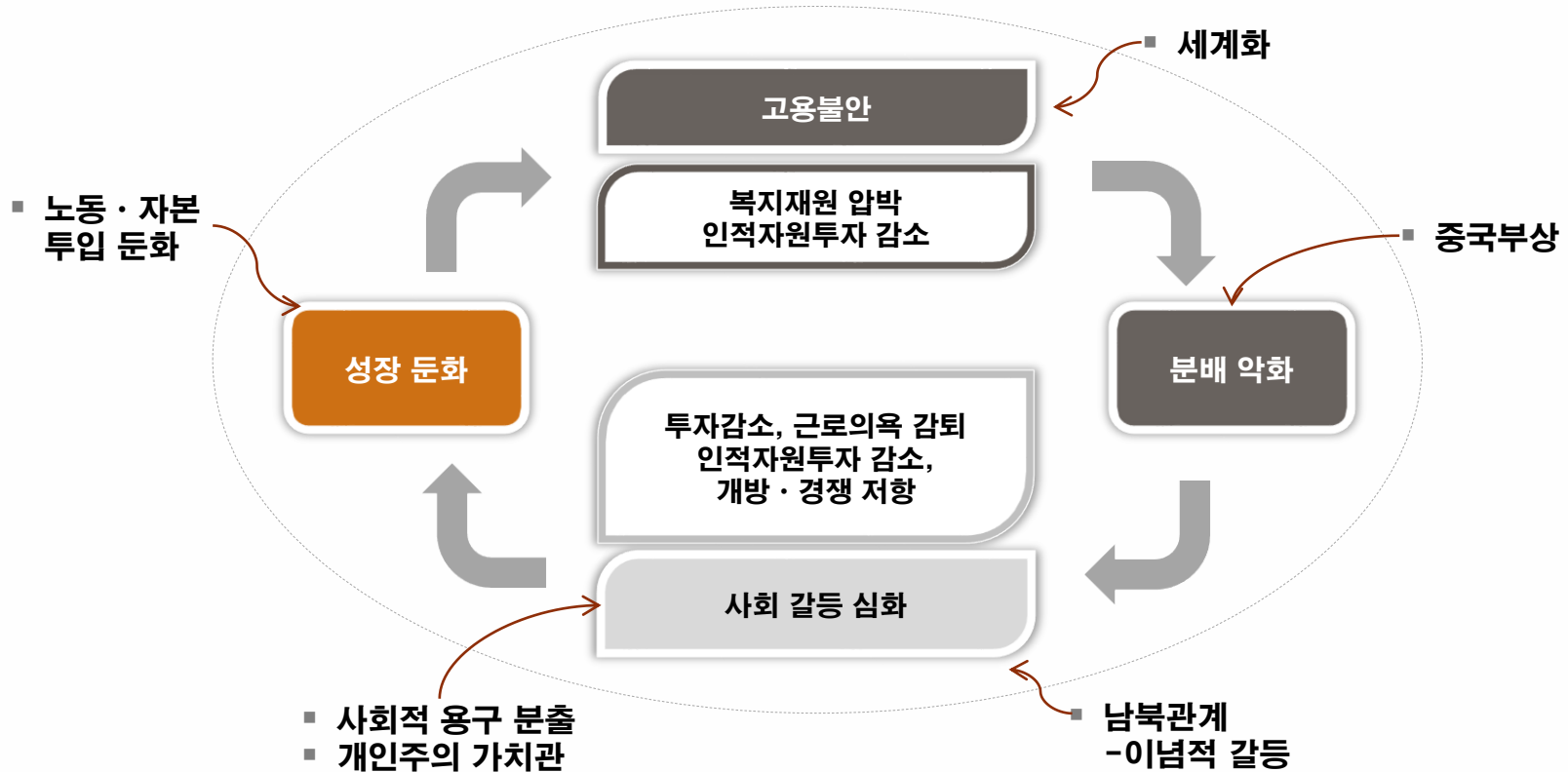
출처: 이지효(Bain & Co.) 12

인식(1): 양극화



출처: KDI (2018)

인식(2):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



- ✓ 이미 90년대 중반 이래 배태 → 최근 표면화
- ✓ 대응 실패시 시스템 위기 시나리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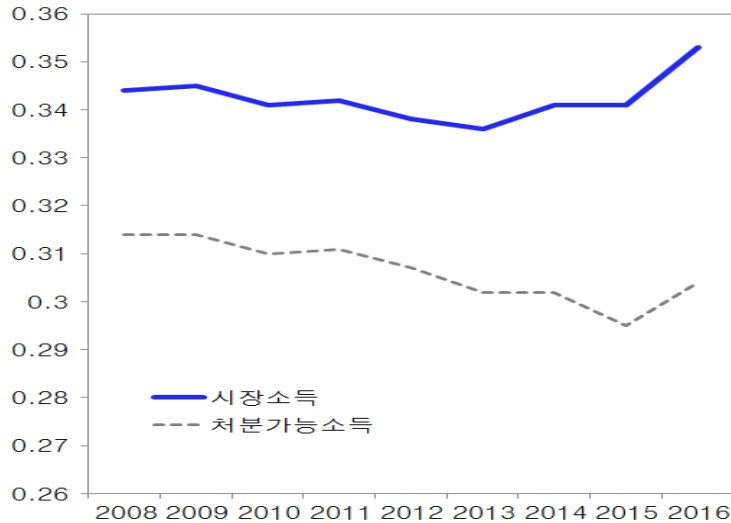
출처: KDI (2018)

> 낮은 재분배 효과

-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격차가 매우 낮은 국가
- 세후소득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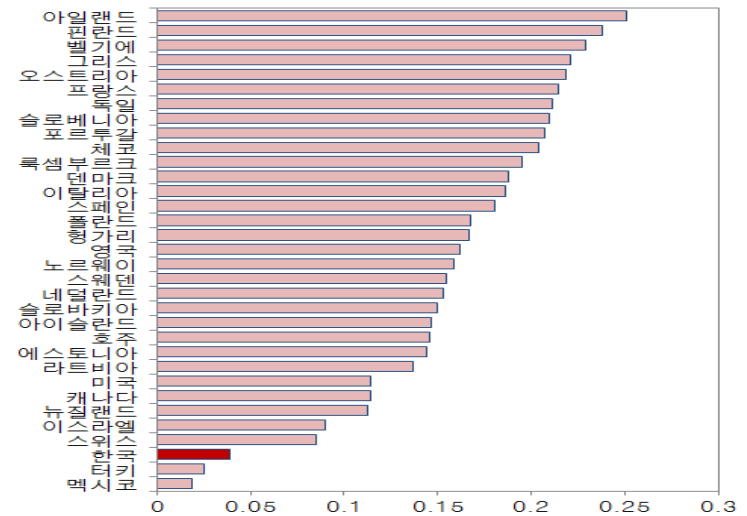
지니계수 추이 및 격차

— 지니계수 추이 —



자료: 통계청

— OECD국가의 지니계수 격차 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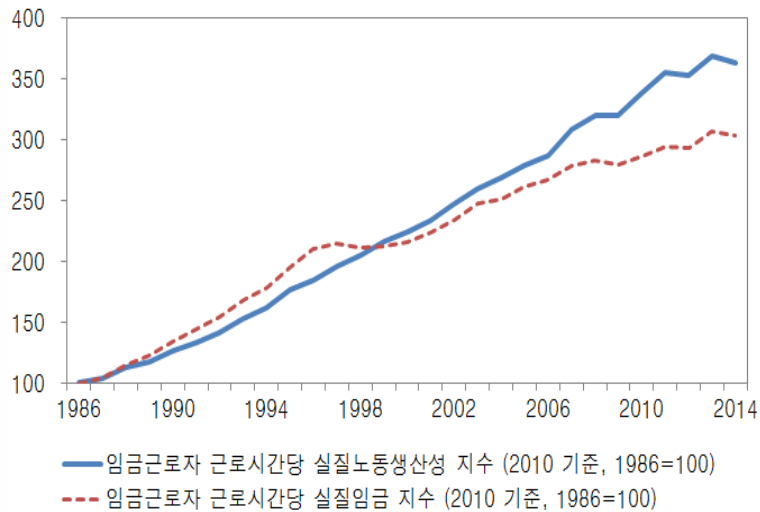
주: 1) 지니계수 격차 = 시장소득 지니계수 -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
자료: OECD

>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장기적 불일치

- 외환위기 이후 근로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→ 임금증가율 < 노동생산성증가율
- 소득주도 성장 논쟁 이전에 임금 수준의 합리성에 대한 교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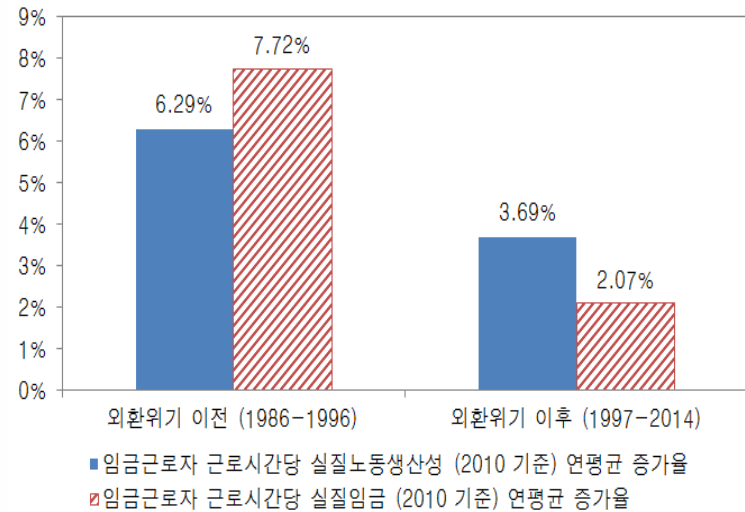
| 노동생산성과 임금 |

— 근로시간당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—



자료: 한국은행

— 외환위기 전후 연평균 증가율 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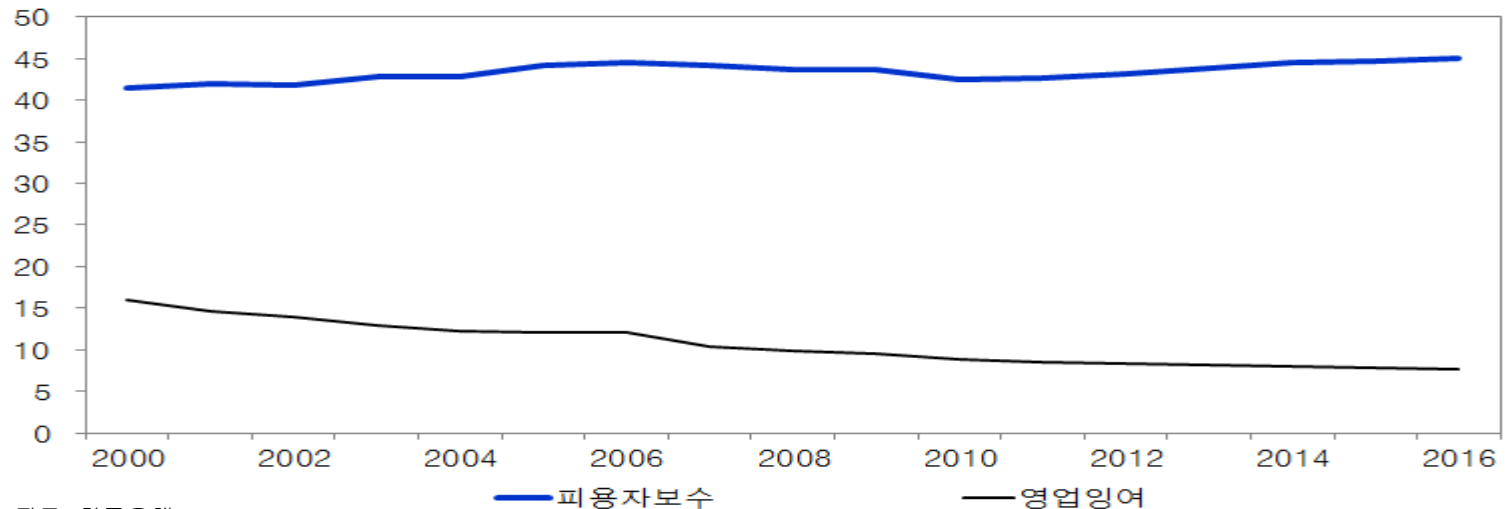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>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

-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의 경영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화
- 자영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임금정책과 자영업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포용성 제고 가능

ㅣ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 영업잉여 ㅣ

— 국민총처분가능소득(GNDI) 대비 가계소득의 항목별 비중 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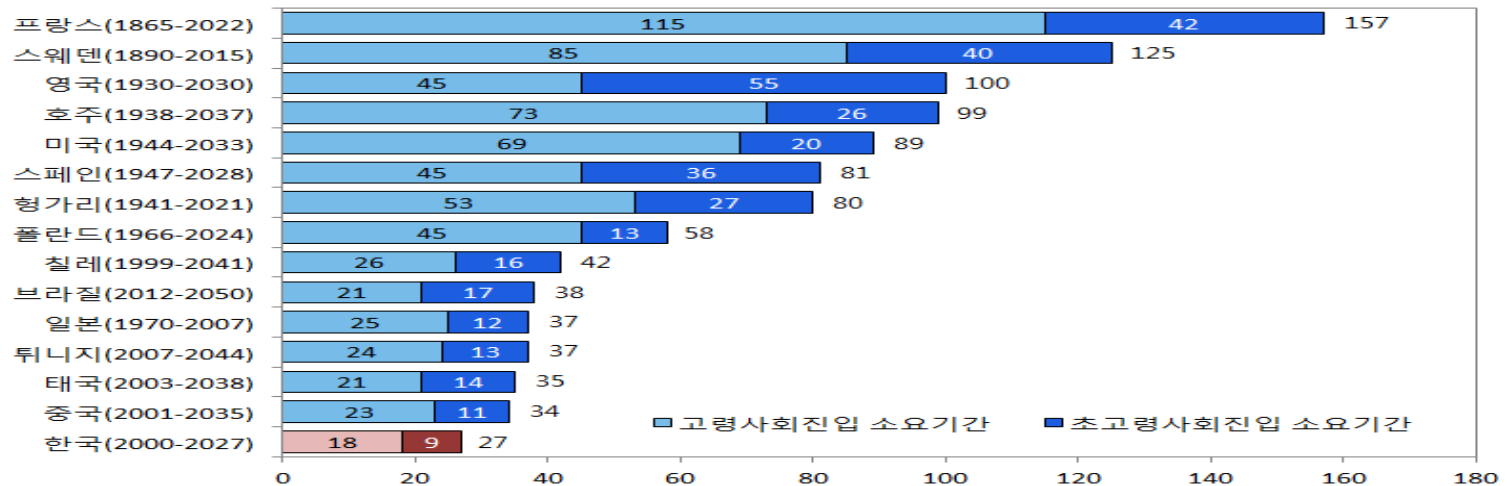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> 고령화 ·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

-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5.9%로 일본(40.1%) 다음 (US Census Bureau)
-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면서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장려정책의 균형 필요

인구고령화

— 주요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속도 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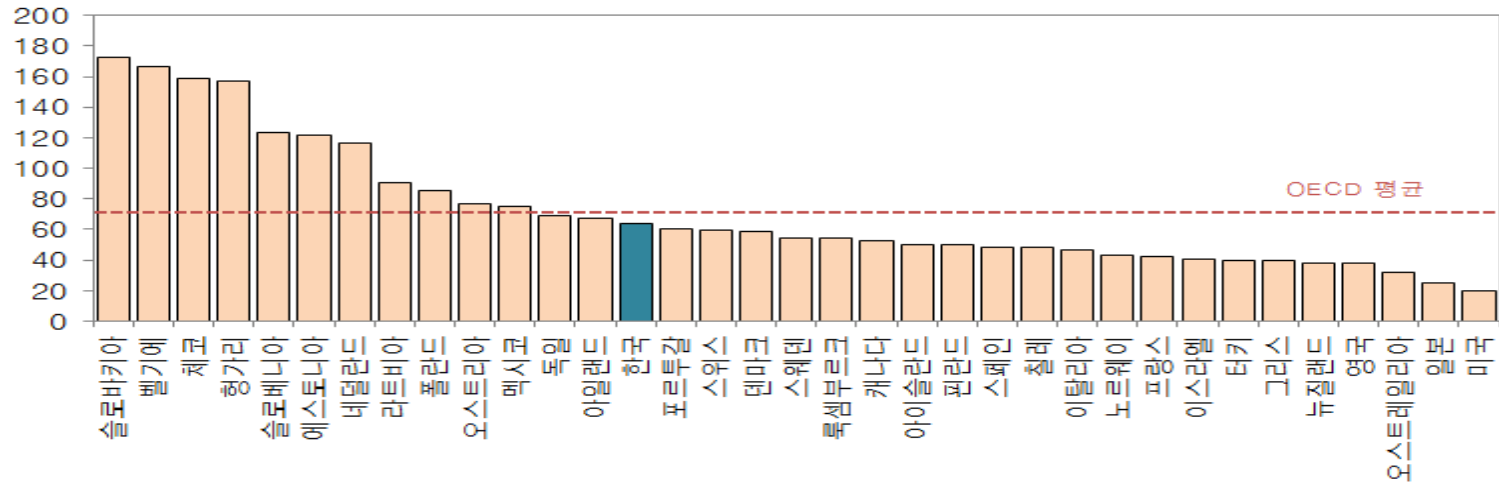
자료: U.S. Census Bureau(2016)

> 높은 대외개방도

- 인적자원이 풍부한 반면 원자재가 부족한 한국은 성장을 위해 대외개방 불가피
- 새로운 산업 및 기술발전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보호보다는 개방이라는 관점에서의 산업정책 요청

| 대외의존도 비교 |

— OECD국가의 대외의존도 —



자료: OECD, 통계청

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

비전

전략
·
과제

기반

> 소득·일자리 중심

- 노동시장
- 가치분 소득
- 사회안전망
- 인적자본투자.

> 혁신성장

- 규제해혁
- 혁신생태계
- 혁신거점
- 혁신안전망

- 공정거래
- 기업지배구조

- 동반성장
- 사회적경제

공정경제

리스크관리

가계, 기업, 대외부문,
정부 (조세·제정)

정책인프라혁신

>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정부 주도의 미시적 개입

- **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논쟁**
 - 최저임금 인상, 근로시간 단축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,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실시에 따른 논쟁 가열
- **불공정거래 부분시정에 그친 기업정책**
 - 가맹점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에 정책적 역량 집중
 -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, 책임성 제고에 대한 개혁 미진
- **혁신정책의 구체성 모호**
 - 중소기업 지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혁신성장에 한계
 - 성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, 여타 정책목표간 관계 등 미정리
- **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비전 불명확**
 - 고용안정성과 경제역동성간 상충관계에 대한 입장정리 필요
 - 대기업개혁과 노사개혁의 동시성 및 연계성 미흡



Part-III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

>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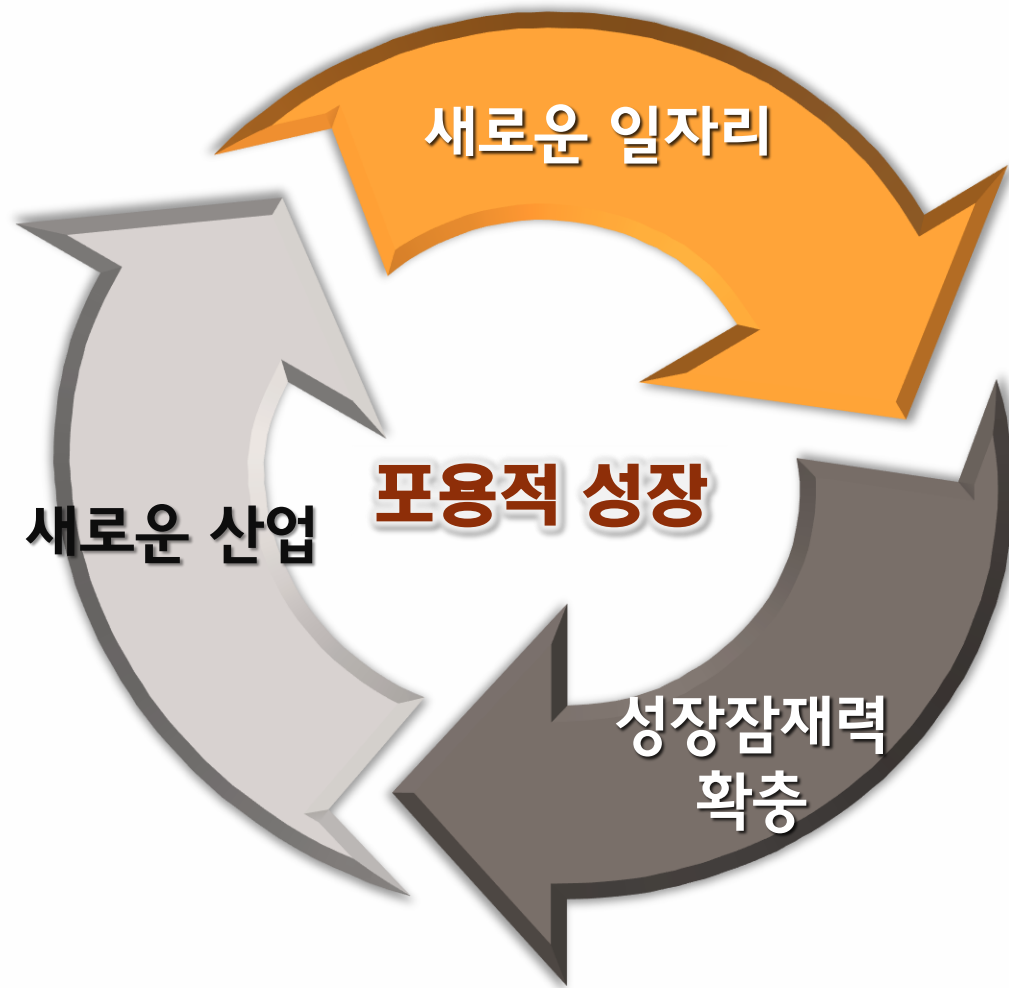
일자리 증가가 없는, 단순한 생산성 증가는 포용적 성장에 부정적인 반면, 저소득층의 노동참여는 포용성에 긍정적 효과 (Hermansen et al., 2016)

지난 30여년간 OECD 국가는 생산성과 고용의 증가로 분배에 중립적

>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요소 및 생산물시장의 개혁이 중요

생산물시장 개혁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시장으로의 자원 재배치를 구현 (Cournede et al., 2016)

생산물시장 개혁으로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이 증가





Part-IV

향후 한국의 과제

> 포용성 문화의 정립

- 포용적 성장의 기본요건은 사회적 신뢰인데, 이를 위해서는 부패를 제어할 제도와 문화의 정착이 선결요건
- 갈등 대신 『신뢰 → 효율 → 포용』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필요

> 구조개혁에 대한 확약

- 구조개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높임으로써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동적인 정의(dynamic justice)를 구현
- 기술의 발전, 경제사회의 통합, 인구구조의 변화 등 추세를 거스를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복원력(resiliency)을 갖추는 유연한 제도 요청

> 재정건전성의 확보

-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정의되는 재정건전성은 양자간의 균형이 중요
- 포용적 성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세제를 개혁하고 세수여건에 대한 판정에 기반하여 지출규모를 조정할 필요

> 디지털화는 미래경제사회 변화를 추동할 핵심 요인

- 범용성 기술변화(all-purpose technological change)는 인간사회의 본질을 바꿈
- 거래비용 절감, 물리적 제약 축소, 개방성 및 투명성 증대, 책임성 제고 등으로 기존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음

> 디지털화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그늘을 수반 · 초래



>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대한 종합적(holistic) 접근 필요

- 개념 재정립: 기업, 고용, 소비자 등에 대한 실제적, 법적 관계 재고
- 정책적 대응: 산업시장정책(공유경제, 플랫폼시장, 정보 및 소비자보호, 지적권보호), 고용노동정책(독립노동), 통화신용정책(결제시스템), 조세재정정책 등



“감사합니다”